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를 중심으로*

이정훈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시간강사**

이상기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노나 혐오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갖는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야당, 야권 정치인, 종북 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다 가상적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배제의 정치'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데 매우 기능적이며, 이런 이유로 상업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든 시민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킨 채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과잉 감정의 혼란 속에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결정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 체제를 유지·존속시켜야 할 정치권력의 필요성이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이며 정파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시사토크쇼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며, 채널A와 TV조선은 그런 정치 체제의 존속에 매우 기능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KEYWORDS 가상적 정치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 배제의 정치, 선정적 정파성, 정치시사토크쇼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4042).

** leetzsche@gmail.com

*** lsngk@pknu.ac.kr

1. 문제 제기

김대중 정부의 집권과 이어진 노무현 정부의 집권을 거치면서 한국 언론의 정파성¹⁾은 노골적으로 깊어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불어 닥친 언론 자유화의 바람은 권위적인 국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정치적 자유가 커진 만큼 시장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IMF 외환위기는 언론의 물적 토대를 크게 약화시켰고, 같은 시기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권에 성공한 진보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부는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미 물적 토대가 취약해진 보수 언론에게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집권과 함께 보수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사이에는 더욱 선명하고 날카로운 정파적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내내 보수 언론과 노무현 정부 사이에는 고소·고발이 그치지 않았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사사건건 부딪치며 서로에게 어깃장을 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은 보수 언론에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보상과도 같았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디지털 매체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인 뉴스 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계속 낮아졌고 광고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심각한 경영 압박에 직면한 보수 언론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산업적 위기에서 탈출을 모색했다. 그리고 수많은 논란과 특혜 시비 속에 정부는 보수 언론 4개사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글로벌 매체 기업을 표방하며 출범하였지만 시청률과 광고 수입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 데다 이른 시기에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서인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네 개 중 특히 채널A와 TV조선은 종합편성을 포기하고 제작비 부담이 훨씬 적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전략은, 첫째 지상파 방송사들이 상대적으로 낮 시간대 프로그램에 주력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낮 시간대 주 시청자 층인 노령층 시청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 셋째 노령층 시청자들 중 채널A와 TV조선의 정파성에 대한 일치도와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비교적

1) 언론의 정파성(partisanship)은 정당-언론 조응성(party-press parallelism)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할린과 만치니(Hallin & Mancini, 2004/2009)는 매체 체계와 정당 체계의 구조가 서로 조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존의 정당-언론 조응성 개념을 확장시켜 서로 다른 매체들이 뉴스와 시사보도, 때로는 오락 콘텐츠를 통해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성을 반영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언론의 정파성은 사주(社主)나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과 정파적 이해관계가 콘텐츠에 반영되는 정도, 즉 정파적 편향성의 의미로 다소 느슨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선거 기간을 중심으로 이들 채널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 노령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²⁾

1987년 민주화에 따른 언론 자유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집권에 이어 종편의 출범, 보다 정확하게는 채널A와 TV조선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중심의 편성 전략을 기점으로 한국 언론의 정파성은 세 번째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국면의 정파성은 선정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전 국면과 차별성을 보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언론의 정파적 대립 구도는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및 공영 방송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신문과 공영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 시기의 정파성이 갖는 선정성에는 비교적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채널A와 TV조선에서 정파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미국의 폭스뉴스(Fox News)가 처음 도입하여 유행시킨 정치시사토크쇼 형식이 주를 이룬다. 채널A와 TV조선 그리고 폭스뉴스의 정치시사토크쇼가 보이는 극단적인 정파적 편향성은 그 자체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그것이 반대 정파나 정치인을 향한 분노(anger)나 혐오(loathing)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통해서 관철된다는 사실에 있다. 같은 선정성이라도 긍정적 감정에 기반한 것과 부정적 감정, 그것도 격렬한 부정적 감정에 기반한 것은 그것이 결과하는 정치적 효과가 판이하게 다르다. 게다가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자 뉴스 전문 채널과 지상파 일부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한 형식을 차용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분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낮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유료방송 시청률이 지상파 3사 시청률보다 높았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채널A와 TV조선은 뉴스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5월 기준으로 종편의 편성 비율은 채널A의 경우 전체 152개 프로그램 중 뉴스가 38.2%, 시사토크쇼가 27%였으며 TV조선의 경우 전체 157개 프로그램 중 뉴스가 29.3%, 시사토크쇼가 36.9%였다. 개국 후 1%에도 미치지 못하던 종편의 평균 시청률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 이듬해인 2013년 6월 종편 4사 합산 시청률은 4.31%로 전년 대비 2배 높아졌으며 2014년 6월에는 6.65%, 2015년 6월에는 6.93%로 매해 증가했다. 그러나 종편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영향력이 오르는 것에 비례해서 각종 심의 제재 건수도 많아졌다. 종편 4사의 전체 심의 제재 건수는 2012년 80건에서 2015년 11월 현재 192건으로 급증했다. TV조선의 법정 제재·행정지도 건수는 2012년 23건, 2013년 35건, 2014년 75건, 2015년 11월 현재 87건으로 매해 증가했는데, 2015년 수치는 전체 심의 제재 건수의 45%에 해당한다. 특히, 채널A와 TV조선은 원색적 언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온 상식을 파괴하고 정부·여당이 원하는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시청자의 눈길을 자극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정철운, 2016, 2, 11).

2015년 11월 5일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ICCPR)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뒤 27개 영역 가운데 25개 영역에서 ‘우려’ 및 ‘(개선)권고’ 판정을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14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34%에 불과해 조사 대상 41개 국가 중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와 함께 공동 26위를 차지했다(한겨레, 2015, 12, 16). 2016년 1월 2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서 ‘미흡한 민주주의’ 그룹으로 떨어졌다(경향신문, 2016, 1, 22). 국제적인 언론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2016년 언론 자유 지수 순위에서도 한국은 2015년 순위보다 10계단 하락하여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조사에서 3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조사에서는 69위로 내려앉았다. 보고서에서 국경없는기자회는 박근혜 정부가 “비판을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간섭하면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경향신문, 2016, 4, 21). 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조사에서도 한국은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등급이 낮아졌다.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5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나미비아와 함께 공동 67위를 차지했다. 공동 57위를 차지한 파푸아뉴기니와 수리남보다 10계단 낮은 순위다(한겨레, 2015, 12, 16). 한편 여러 언론사에서 한국 특파원을 지낸 경력을 가진 안나 파이필드(Anna Fifield)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도쿄 지국장도 박근혜 정부가 자신이 취재해 본 한국 정부들 중에서 가장 취재하기 어려운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취재해 봤지만 언론인 입장에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한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이 김정은 정권보다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약간 나은 정도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16, 3, 31).

민주주의의 위기와 분노나 혐오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기반한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이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 된 후 박근혜 정부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이 연구는 둘의 관계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혀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³⁾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을 가능하게 만든 조건으로 작용하며, 민주주의

3) 달(Dahl, 1998)은 ‘이상으로서 민주주의’와 ‘현실로서 민주주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정의(定義)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목표에 관한 것인 반면, 민주주의에 필요한 정치제도나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조건에 대한 질문은 민주주의의 현실에 관한 것이다. 달의 구분을 적용하자면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현실로서 민주주의’에 해당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

의 위기라는 환경 속에서 선정적 정파 언론은 분노나 혐오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통한 ‘가상적 정치 참여(imaginary political participation)’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가설적 주장을 제시하고 그것의 논리적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결국 이 연구는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가설적 형태의 대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 이후 심화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이명박 정부 이후 종편, 특히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갖는 선정적 정파성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이명박 정부 이후 심화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채널A,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의 선정적 정파성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2.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서구 언론학에서 주류 패러다임이 되었다.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민주주의의 견지에서 사유하는 전통이 언론학에서 얼마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둘 사이의 분리(de-coupling)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2011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언론과 민주주의의 분리(de-coupling journalism and democracy)’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고, 거기에서 발표된 논문은 2013년 <Journalism>이라는 학술지에 특집호로 실렸다(Josephi, 2013).

여기에서 제시된 주장은 대체로 언론이 민주주의와 맺고 있는 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가 언론이 존재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며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즉, 언론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국가에서도 언론은 존재하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언론을 민주주의의 견지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차단하는 부정적 효과를 지닌다고도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언론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한 번 자리 잡은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언론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자유로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건전한 민주주의 체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사유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용하다. 특히

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대의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또한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정치제도로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한다.

언론과 민주주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에서 그 중요성과 유용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일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많고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언론과 민주주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유지·발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이며, 언론이 그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규범적 접근이다. 대표적인 예로, 셔드슨(Schudson, 2008)은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information), 탐사(investigation), 분석(analysis), 사회적 공감(social empathy), 공적 토론(public forum), 동원(mobilization)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언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맥네어(McNair, 2010)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 정보 제공(inform), 교육(educate), 발표의 장(platform), 공표(publicity), 옹호(advocacy)를 제시하였다. 규범적 접근의 핵심은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의 존재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식견 있는 시민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식견 있는 시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은 언론의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현실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언론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는 미디어 병(media malaise) 이론이다. 미디어 병 이론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시민의 정치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은 주로 부정적인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즉, 미디어 병 이론가들은 정치 과정에 대한 공중의 환멸과 그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냉소주의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비디오 병(video malais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 병 이론가들은 상업적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는 방송이 정치 정보를 가볍고 선정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방송 언론에 자주 노출될수록 시민들의 정치 냉소주의와 정치 불신이 커지고 정치 효능감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Norris, 2000).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이론과 미디어 병 이론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 다를 뿐 두 입장은 모두 언론이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기능을 가지며 언론이 그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조금 과장하여 표현하자면 민주주의 체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도 언론 때문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를

겪는 것도 언론 때문이다.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입장이 공통적으로 갖는 한계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두 입장은 모두 마치 한 가지 유형의 이상적인 언론 체제와 한 가지 유형의 이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Josephi, 2013).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민주주의가 이상과 실재를 모두 뜻하는 단어라는 사실이다(Dahl, 1998).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만큼 민주주의 체제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상으로서 언론과 이상으로서 민주주의의 관계를 모색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달의 지적처럼 이상과 현실 간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현실로서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언론에 있어서도 미국 중심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론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언론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미국의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이론과 개념을 한국 사회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해보다 오해를 낳기 쉽다.

둘째, 두 입장 모두 언론이 주어가 되다 보니 언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윌리엄스와 델 카르피니는 매체 체제(media regime)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Williams & Del Carpini, 2009, 2011). 그들은 매체 체제를 정치, 경제, 문화의 비교적 안정적인 제도적 배열 속에서 역사적으로 특수한 정보 공급 구조로 파악한다. 하나의 매체 체제가 확립되면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정보가 통과하는 문(gate)을 만들게 되는데, 이 문을 통제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 문화 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매체 체제 개념에 따르면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는 매체 체제로서 언론의 존재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며 한 번 확립된 언론은 민주주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언론과 민주주의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셋째, 두 입장은 민주주의의 건전성과 위기를 기준으로 좋은 언론과 나쁜 언론을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지만 그것을 통해 좋은 민주주의와 나쁜 민주주의를 구분할 수는 없다. 바꿔 말해서 두 입장은 모두 '나쁜 민주주의의 원인은 나쁜 언론'이라는 주장을 통해 자칫 나쁜 민주주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나쁜 언론이 전적으로 민주주의를 나쁘게 만들 수 없듯이 나쁜 민주주의가 전적으로 언론을 나쁘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나쁜 민주주의가 나쁜 언론이 존립하고 존속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다. 그리고 나쁜 민주주의가 나쁜 언론의 존속에 유리한 조건이라면 반대로 나쁜 언론은 나쁜 민

주주의가 존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나쁜 민주주의와 나쁜 언론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3.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특성

1)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와 배제의 정치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는 무엇보다 참여의 위기다(최장집, 2010). 고전적 민주주의에서부터 참여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는 정치적 효능감을 촉진하고 집합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낳으며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식견 있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이유에서 높이 평가되어 왔다(Held, 2006/2010). 달(Dahl, 1998)에게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다름 아니다. 그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들이 구비될 때 사회적 자유와 실질적 민주주의는 진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국가를 포함한 어떤 조직도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효과적 참여(effective participation), 투표의 평등(voting equality), 계몽적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 의제의 통제(control of the agenda), 참여의 포괄성(inclusion of adults)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효과적 참여는 모든 구성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알릴 수 있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투표의 평등은 최종적인 정책 결정 순간에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효과적인 투표의 기회를 가져야만 하며 모든 투표는 평등하게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계몽적 이해는 모든 구성원들이 관련 정책 대안과 그 대안들이 가져 올 가능한 결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구성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요 사안에 관해 질문, 토론, 숙의(deliberation)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제의 통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제에 상정되어야 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 그리고 그 방법을 결정할 배타적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거나 결정하지 않을 문제가 어떤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시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참여의 포괄성은 모든 성인들이 앞의 네 가지 기준이 시사하는 완전한 시민의 권리를 향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달의 논의를 따라 국가의 정치 과정 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정치를 포괄의 정치(politics of inclusion)라고 한다면, 소수의 사회적인 강자 집단이 과잉 대표되는 정치를 배제의 정치(politics of exclusion)라고 할 수 있다(최태욱, 2014).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비례성이 지나치게 낮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⁴⁾, 실질적 양당제, 제왕적 대통령이 이끄는 단일 정당 정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제의 정치로 분류할 수 있다(강신구, 2012; 윤종빈, 2015; 최태욱, 2014). 한국과 같이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⁵⁾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배제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한국의 그것은 배제의 강도가 매우 강한 “독종 다수제 민주주의”(82쪽)라는 점이 특징이다(최태욱, 2014).

한국과 같이 다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의 정치학자들 또한 민주주의 위기의 중요한 징후로 배제의 정치를 지목하고 있다. 크렌슨과 긴즈버그(Crenson & Ginsberg, 2004/2013)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축소되는 민주주의(downsizing democrac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축소’는 무엇보다도 정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일어난다.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 없이도 군대를 모으고 세금을 걷고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정치 엘리트들이 대중의 정치 참여에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크렌슨과 긴즈버그는 축소되는 민주주의를 이전의 대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와 구분해서 개인 민주주의(personal democracy)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대중 민주주의 방식과 달리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인 이유는 개인 민주주의의 새로운 통치 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4) 한국 선거 제도의 비례성은 레이파트의 분석 대상국 36개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다(Lejphart, 2012).

5) 레이파트(Lijphart, 2012)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 디자인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영미식이라고 불리는 다수제 민주주의고, 다른 하나는 (대륙)유럽식이라고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다. 두 유형 간의 핵심적인 차이는 정치권력의 분산 정도와 행사 방식에 있다.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와 정치 세력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원칙이다. 권력의 행사도 패자에 대한 고려 없이 승자 독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정치권력이 여러 세력,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 정당들에 분산되어 상호 의존과 협력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 과정은 상이한 정치 세력들 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 합의에 의한 권력 사용이 제도적으로 강제된 상태인 것이다.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

개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중은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 고객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과 ‘고객’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시민은 정부를 소유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지만 고객은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뉴스 매체 등을 통해 전체 대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최소화될 수 있다. 시민은 고객으로 강등되었고 공공 행정은 고객 관리로 격하된 것이다.

크라우치(Crouch, 2005/2008) 또한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거나, 심지어 더욱 강화된 채로 정치와 정부는 점점 더 민주주의 이전 시대에 특징적이었던 방식으로 특권적인 엘리트의 통제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현상을 포스트민주주의(post-democrac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포스트민주주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정치 엘리트들이 대중의 요구를 관리하고 조작할 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직업 정치인들은 통치자라기보다 사업이 계속 번창하기를 바라는 가계 주인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점차 정치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상관하지 않게 됐고 심지어 투표도 하지 않게 됐다. 이로써 그들은 민주주의 이전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차지해야 했던 위치, 즉 정치 참여가 배제된 위치로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의 축소에 대한 책임이 시민 사회의 쇠퇴가 아니라 정부 제도의 변화에 있다는 크라우치(Crouch, 2005/2008)의 주장이다. 사실 정치 제도가 시민 사회의 산물인 것만큼이나 시민 사회 또한 정치 제도의 산물이다. 시민적 전통은 국가가 그저 가만히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공적 권위의 행사가 시민 문화를 만들며 민간 기구들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은 국가와 정치 엘리트들이 이들을 필요로 하고 동원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만약 시민들이 수동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개인적 관심사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정치 질서가 더 이상 그들에게 정치에 대한 집단적 참여의 유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양상

배제의 정치는 낮은 투표율⁶⁾과 같은 단순 수치만으로 그 본모습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

6) 한국의 투표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 2000년에 실시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012년에 실시한 제18

다. 배제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참여는 보장되지 않은 채 정치 엘리트와 정당 간의 갈등만 격화되는 불일치로 나타난다(Crenson & Ginsberg, 2004/2013). 격렬하고 공격적인 언어와 수사(修辭)를 앞세운 정치적 대립과 투쟁은 제도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만 반영할 뿐이다. 배제의 정치에서 중심적인 갈등 구조인 대표된 영역과 대표되지 않은 영역 간의 갈등은 정치 엘리트 간의 이념적 양극화에 의해 은폐되어 있다(최장집, 2010).

한국 정치의 이념적 갈등이 격화되는 원인을 분석한 이내영(2011)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시민들의 이념 양극화보다 국회의원의 이념 양극화가 훨씬 강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2월 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국회의원 비율은 전체 61.9%였던 것이 2008년 4월 조사에서는 22.8%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에 중도 성향의 시민 비율은 49.5%에서 43.1%로 약간 낮아졌을 뿐이었다. 줄어든 중도 성향의 수치가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쪽으로 많이 옮겨 갔는지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 시민의 경우 줄어든 중도 성향의 비율도 낮지만 그 비율만큼 보수와 진보 성향의 비율이 비슷하게 증가한 반면에 국회의원의 경우 중도 성향의 비율이 줄어든 만큼 진보 성향의 비율은 그다지 늘지 않고 보수 성향의 비율만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이념 분포 변화를 보면 진보 성향의 비율은 19.5%에서 24.0%로 증가한 반면에 보수 성향의 비율은 18.6%에서 53.1%로 늘어났다. 2008년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의 이념 성향은 중도가 43.1%로 가장 많은 반면에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은 보수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중도는 22.8%로 가장 적었다. 요컨대 일반 시민의 이념 성향은 중도로 수렴되는 추세가 나타나는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보수화와 함께 중도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이념적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념적 양극화의 원인이 시민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나 정당이라는 사실은 이념적 거리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2008년에 7점 척도(점수가 낮을수록 진보적)로 측정된 시민들의 이념적 거리를 보면, 가장 진보적인 민노당 지지자(4.2)와 가장 보수적인 친박연대 지지자(6.7) 사이의 거리는 2.5였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같은 척도로 측정된 국회의원들의 이념적 거리를 보면, 가장 진보적인 민노당 의원(1.4)과 가장 보수적인 자유선진당 의원(6.2) 사이의 거리는 4.8이었다. 일반 시민들 사이의 이념적 양극화 정도보다 국회의원들 사이의 이념적 양극화의 정도가 약 2배 정도 높은 것이다. 이것은 정치 엘리트

대 대통령선거까지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열 번의 선거에서 평균 투표율은 58.3%에 불과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특히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은 심각한 수준인데,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37.9%에 불과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가 시민의 이념적 분화를 반영하는 것 이상으로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분명한 증거라 할 수 있다(이내영, 2011).

중도 성향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18대 국회의원의 주요 정책별 선호를 정당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비교 대상인 10개 주요 정책 쟁점 모두에서 높은 차별성을 보였다. 특히 거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모든 정책에 대한 선호에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내영, 2011).

한편 강원택(강원택, 2012)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들 간의 이념적 차이 또한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점 척도(점수가 낮을수록 진보적)로 응답한 조사 결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간의 이념적 차이는 16대 국회에서는 각각 5.40과 4.03이었고, 17대 국회에서는 각각 5.40과 4.01이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각각 6.00과 4.39였으나, 19대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6.21과 2.88로 나타나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의 경우 정치 엘리트의 보수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념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에 시민들의 이념은 중도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정당 간의 이념 갈등이 커지면서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도로 수렴하는 시민의 이념적 성향은 정치 엘리트와 정당 간의 이념 갈등 속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4. 한국 언론 정파성의 특징

한국 언론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로 강한 정파성이 꼽히고 있다(박영흠·김균, 2016). 사실과 의견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취재·보도 기술(skill)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정파적 편향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공영 방송과 같은 특수한 매체 형식을 제외하면 언론이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다원주의(pluralism)가 잘 정착되어 있는 사회라면 언론이 저마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최대한으로 대표되고 반영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정파성 그 자체가 아니라 정파성이 시민들에게 관철되는 방식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종편의 출범, 보다 정확하게는 채널A와 TV조선 등 일부 종편 채널들이 종합 편성을 포기한 채 마치 정치 전문 채널인양 채널 정체성의 탈바꿈을 시도하면서 한국 언론의 정파성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졌다. 수입과 지출, 즉 시청률 경쟁과 제작비 감소의 압박은 채널A와 TV조선으로 하여금 채널의 정체성을 정치 전문 채널로 전환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양식과 성격도 바꾸게 만들었다. 선정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시사토크쇼 양식이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자기 정파(copartisans)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정파(opposing partisans)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부정의 강도는 분노나 혐오와 같이 매우 격렬하다. 다시 말해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의 핵심적인 특성은 분노나 혐오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이용하여 반대 정파를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기 정파의 시청자들에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점이다. 반대 정파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 생성·강화되는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⁷⁾는 인종에 기반한 양극화만큼이나 강력하다(Iyengar & Westwood, 2015; Ulbig, 2015).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1) 채널A와 TV조선 정치시사토크쇼의 구체적 사례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는 반대 정파와 정치인을 분노나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으로써 자기 정파의 시청자들에게 정서적 양극화를 강화시키고 있다.⁸⁾ 뒤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겠지만 이것은 배제의 정치가 존속하는 데 매우 기능적이다. 그렇다면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재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하의 사례들은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7) 송현주(2015)는 유권자의 이념적 양극화와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정파적 양극화를 구분한 바 있는데, 이것은 실제 유권자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당 및 정치인의 이념적 양극화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은 이론적 전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념적 양극화의 정도는 약하더라도 실질적 양당제 구도하에서 투표를 통해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두 정당 중 한 정당을 지지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정파적 양극화는 이념적 양극화보다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념적 양극화가 정파적 양극화로 전환되는 데 선정적인 정파 언론의 정서적 양극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8) 이는 야권 성향의 팻캐스트(‘나는 꿈수다’)에서도 공히 드러난 문제다. 2000년대 초반 반미 시위에 영향하여 한국의 살인마 유영철을 미국에 보내 미국에 대해 테러를 감행하고 미국인을 무차별적으로 죽이자는 발언, 당시 미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를 강간하고 죽이자는 주장, 주한 미군들을 인질로 삼아 차례로 죽이자는 주장, 노인들이 시위를 못하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없애자는 주장 등이 논란이 되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가 점쳐졌던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막달’ 논란으로 대패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장담하던 새누리당도 제2당으로 전락했다. 19대와 20대 두 번의 선거로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양극화는 같은 정파에 역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9월에 발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재에 나타난 종편 시사·보도 방송언어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1) 야당에 대한 분노와 혐오

야당을 ‘정신질환’에 걸린 집단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 2014년 1월 14일 채널A에서 방송된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에서 한 출연자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호남인들을 우리 포로로 잡아 놨다, 염려하지 마라, 이 발상이예요 … 포로라는 표현은 제가 정말 좋게 표현한 거고 노예예요, 노예 … 이거는 정신질환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마구 부르기도 하고 썩은 고기, 하이에나 운운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8월 28일 TV조선에서 방송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진행자는 출연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성공을 보장하는 한 가지의 강력한 조합은 독수리의 눈과 사자의 심장을 갖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독수리의 눈이 아니고 노무현을 따라 하는 노무현의 앵무새 입, 그 다음에 과거라는 썩은 고기만 좇아다니고 냄새를 맡고 다니는 하이에나의 코,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말했고 한 출연자는 대답으로 “저는 독수리눈이 아니라 참새의 눈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오물’로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10월 14일 채널A에서 방송된 <박정훈의 뉴스 TOP 10>에서 진행자는 야권의 유력 정치인이자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예측해 보면서 “박원순 시장의 속내, 과연 어떨까요? … 속마음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아, ‘새정치 오물’ 안 묻게 조심해야지”라고 말했다.

야당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표현은 2015년 5월 2일 TV조선에서 방송된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에서 정점을 찍는 듯하다. 진행자와 출연자들 모두가 새정치민주연합과 소속 국회의원들을 “문재인 의원 얘기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꼭 그냥 대학교 3학년 운동권 같아요 …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 탈레반 정신이지, 이게 보면 … 박지원 의원은 조금 맛이 가셨습니다 … 문재인 대표를 불임대표라고 그러잖아요 … 동교동계도 불임계보예요 … (친노 정치인들의 특징은) 싸가지 없는 입 진보. 그러니까 입으로 가지고만 진보지, 그것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내용에서는 그야말로 싸가지 없다”라고 말했다.

(2) 야권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합의한 것을 두고 ‘불륜’으로 표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2014년 8월 3일 채널A에서 방송된 <직언직설>에서 한 출연자는 “그런데 저 사람,

두 사람이 눈이 맞은 게요 … 이전부터 서로 내통, 즉 오랜 불륜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국회의원을 ‘강도와 머슴’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8월 28일 TV조선에서 방송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는 “예를 들자면 과거에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 집에 들어가서 혁명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칼로 강도짓을 해서 징역을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새정치연합의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 이번에 문재인 의원은 전직 대통령 후보로서 머슴 의식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을 ‘구렁이’에 비유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11월 5일 TV조선에서 방송된 <강적들>에서 한 출연자는 “(박원순을) 구렁이라고 하면은 한 천 년 묵은 구렁이 … 박원순한테 한 번 실망한 사람은 절대 박원순한테 다시 안 돌아가는데”라고 말했다. 같은 출연자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과 소통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그게 생쇼라니까, 생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인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계속되었다. 2015년 3월 2일 TV조선에서 방송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한 출연자는 문재인 대표를 두고 “얼굴마담 아닌가 … 문재인 의원이 약간만 헛발질하면 그 친노 강경이 다시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진행자는 당시 호화 공판 논란에 휩싸였던 박원순 시장에 대해 출연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후보로서 도대체 정신감정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말했다.

4·29 재보선 지원 문제를 놓고 회동한 야당의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을 폄하하는 방송도 있었다. 2015년 4월 3일 TV조선에서 방송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진행자는 출연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 측이) 동교동계를 뒤 썩은 구정치인으로 본다, 그럼 자신들은 뒤 썩은 신정치인으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지 … (오히려 문재인 대표 측이) 더 지역주의, 흉악한 지역주의자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라고 말했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닭’에 비유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10월 20일 TV조선에서 방송된 <김광일의 신통방통>에서 한 출연자는 국정감사에서 ‘고령 발언’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을 두고 “야당이 제가 볼 때는 좀 닭하고 닭은 거 같아요 …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순식간에 순간 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3) 중복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

채널A와 TV조선에서 가장 강한 분노와 혐오, 그리고 적개심을 보인 대상은 북한과 중복 세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을 방문한 전 미국 프로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Dennis Rodman)에 대한 표현의 수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3년 12월 19일 TV조선에서 방송된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데니스 로드맨에 대해 “로드맨도 사실 걸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도깨비 형상이라고 그럴까?… 역시 김정은스럽다. 사이코패스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데니스 로드맨에 대한 혐오 발언은 2014년 1월 11일 TV조선에서 방송된 <장원준의 토요일 신통방통>에서도 계속되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그들 두고 “저는 저 사람이 북한에 가는 이유가 마약하고 여자 중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성적(性的)으로요… (북한에서 데니스 로드맨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 줄 것이라며) 호는 연탄”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중복콘서트’가 논란을 일으키자 여기에 대해서도 강한 분노와 혐오감을 드러냈다. 2014년 11월 24일 채널A에서 방송된 <직언직설>에서 한 출연자가 중복콘서트에 출연한 사람들에게 대해 북한을 비호하는 “정신병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이에 진행자가 표현이 다소 과하다고 지적하자 그는 “저는 고소당해도 좋아요. 저희도 고소할 거니까…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

2014년 12월 18일 채널A에서 방송된 <김부장의 뉴스통>에서도 중복콘서트 출연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계속되었다. 한 관객이 콘서트 현장에 인화물질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짐작컨대는 여러 가지 좀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한 출연자는 중복콘서트 출연자의 남편에 대해서 “정신병이든지 아니면… 북한의 이익에 복무하는 전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복콘서트의 또 다른 출연자 남편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식 속에 그야말로 이 북한에 대한 동경과 찬양 이런 부분이 가득이든지… 어쨌든 이분의 최근에 보이는 행태는 거의 공작원적 단계에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2015년 1월 12일 TV조선에서 방송된 <황금 펀치>에서도 중복콘서트 출연자와 지지자들에 대해 “정말 중복 골수들이 나왔습니다… 노길남 씨 같은 경우는… 두목은 못 됩니다. 잡 뭐, 냄새끼도 되는데, 저거는 하인 정도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복 세력에 대한 혐오와 증오는 사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2014년 2월 22일 TV조선에서 방송된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에서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진행자가 “이번에 김연

아가 금메달을 도둑맞았잖아요. ‘러시아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 이에 출연자들은 “사회주의는 도둑이에요 … (사회주의는 평등을 중요시 하는데) 평등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도둑놈 심보예요 … (러시아인은) 사회주의 사람이니까 도둑질 근성이 본래 남아 있는 거죠 … 소련은 원래 잘 속이는 거 같아요. 푸틴이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세계를 속인 겁니다 … 그 양반 주특기가 … 훔치는 거야 … 러시아가 아직 의식 수준이 아주 유아적인 단계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4) 요약

이상의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널A와 TV조선이 반대 정파로 삼고 있는 대상들은 야당, 야권의 정치인, 그리고 중북 세력이었다. 여기에는 외국이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둘째, 채널A와 TV조선이 반대 정파를 묘사하는 방식은 분노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흉악한 지역주의자, 사이코패스, 마약과 섹스 중독자, 도둑놈 등에 비유하면서 분노를 조장하거나 구렁이, 닭, 오물, 썩은 고기, 하이어나, 정신병자 등에 비유하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식이었다. 셋째, 확실한 물증이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오직 적대적 감정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채널A와 TV조선의 자기 정파 시청자들은 반대 정파에 대해 숙의하거나 좀 더 알아보려고 시도하기보다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정적 정파 언론의 관계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 정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무엇보다 참여의 위기다(최장집, 2010). 참여의 위기는 정권과 유권자 사이의 괴리를 낳고 결국 정치 실패로 이어져 배제의 정치로 귀결된다. 배제의 정치에서 정치 과정은 정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은 전문 관료 집단에 의해 행정적으로 처리되거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사법적으로 결정된다.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 시민들은 매체가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 엘리트 간의 대립과 갈등을 구경하며 즐기는 관객에 위치로 전락한다.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도 배제의 정치 체제가 커다란 문제없이 작동·유지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시민들이 마치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즉, 시민을 정치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또는 시민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어도 겉으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시민이 자신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거나, 적어도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느껴야’ 한다. 특히 배제의 정치 체제하에서 집권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정파 유권자들이 그렇게 ‘느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우리는 이 과정을 야당과 야권의 정치인, 그리고 중북 세력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환상을 통해 실현되는 가상적 정치 참여⁹⁾라고 부르고자 한다. 가상적 정치 참여를 통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그것을 토대로 사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 간에 이성적인 토론이 가능하며 그 결과가 정책 결정에 정확히 반영될 때 비로소 시민의 참여는 가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게 된다. 가상적 정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유지·확대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반대 정파를 끊임없이 분노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선정적인 정파 언론의 존재가 힘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채널A와 TV조선으로 하여금 뉴스 수용자들을 위한 공론장이 되는 대신 그들에게 분노와 혐오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A와 TV조선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2)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 정파성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미치는 영향

(1) 분노와 혐오의 특성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갖는 정파성은 분노나 혐오와 같은 적대적 감정에 기반해 작동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분노와 혐오의 감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커스(Marcus, 2002)는 불안(anxiety)과 혐오는 모두 부정적 감정이지만 혐오가 “열정(enthusiasm)의 어두운 면”(p. 120)이라는 점에서 둘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혐오는

9) 현재로서는 가설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 불과한 개념이다. 보다 정교한 개념화 작업은 여기에서 시도되기보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안과 같이 부정적 방향성을 가지지만 불안과 달리 열정의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는 불안과 혐오를 세 가지 차원에서 비교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침범(intrusion)에 대해 혐오는 가능한 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게 하는 반면, 불안은 기존의 반응을 고치게 만든다. 둘째, 대안적인 목표나 행동 방침에 대한 고려 의사(willingness to consider alternative goals or courses of action)에 있어서 혐오는 대안적인 목표나 행동 방침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불안은 그것에 대해 기꺼이 고려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실현에 대한 보상, 즉 반복 가능성에 있어서 혐오는 반복 가능성을 강화하는 반면, 불안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허디, 펠드만, 그리고 카세스(Huddy, Feldman & Cassese, 2007)는 불안과 분노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불안은 위험 회피(risk avoidance)와 동일시되는 반면, 분노는 위험 행위(risky action)와 연결된다. 불안과 분노는 결과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분노는 행동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일련의 인지적 결과와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덜 신중하고 덜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만들며 지각된 위험은 축소시키고 위험 행위에 대한 용인은 더욱 커지게 만든다. 반면에 회피와 관련되는 불안은 위험에 대해 민감성과 주목도를 높이고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하며 정보 처리를 더욱 신중하게 하도록 만든다.

그들에 따르면 인지 처리 과정의 깊이에 관해서도 분노와 불안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기분(mood)은 인지 처리 과정의 수준을 깊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분노에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분노는 불안보다 인지적 노력과 인지 처리 과정의 수준이 낮다. 분노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보다 고정관념(stereotype)에 더 잘 사로잡히며 설득적 연설의 피상적 측면에 의해 더 잘 확신을 갖게 된다. 분노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이고 피상적이며 발견적인(heuristic) 과정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분노한 사람은 행동 지향적이고 판단을 매우 빨리 내리며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도 매우 빠르다.

정리하자면 분노와 혐오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 기존의 태도와 입장을 고수하게 만들고, 대안적인 목표나 행동 방침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며, 반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부 자극이나 정보에 대해 피상적이고 빠르게 판단하며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인지 처리 과정의 수준이 낮은 반면, 행동 지향성이 매우 높다.

(2) 적대적 감정과 가상적 정치 참여

이 연구는 참여의 위기를 본질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배제의 정치로 귀결되며, 배제의 정치는 정파적 언론이 조장하는 가상적 정치 참여를 통해 유지된다고 가설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가상적 정치 참여가 필요한 배제의 정치 체제는 그것을 수행해 줄 언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 정파성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되어 준다. 한편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 정파성은 가상적 정치 참여를 만들어 내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배태한 배제의 정치가 존속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배제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채널A와 TV조선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확대된 정치적 영향력은 채널A와 TV조선이 만들어 내는 가상적 정치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 그렇다면 채널A와 TV조선이 배제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핵심은 선정적 정파성이 가상적 정치 참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의 성공 여부는 분노나 혐오와 같은 적대적 감정의 활용에 달려 있다.

배제의 정치는 참여의 위기에서 비롯한다. 이런 체제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은 전문 관료 집단과 사법 체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투표를 통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선거 기간이 아닌 대부분의 시기 동안 시민들은 실질적 정치 참여가 제한된 채 정당과 정치 엘리트 간의 이념적 투쟁과 갈등의 구경꾼에 머물러 있다. 실질적 양당제¹⁰⁾ 구도인 한국의 정치 체제에서 정치 엘리트와 시민들 간의 이념적 갈등의 불일치는 매우 크다. 이런 불일치는 정치 엘리트 간의 이념적 양극화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적 양극화를 정치 엘리트 간의 이념적 양극화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은폐되기 쉽다. 다시 말해, 배제의 정치 체제에서 시민들의 정서적 양극화는 언론을 통해 과장되거나 언론에 의해 자극되어 실제보다 높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적대적 감정(혐오, 분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서적 양극화는 반대 정파에 대한 적대적 감정의 사용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를 통해 야당과 야권 정치인, 그리고 중복 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감정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집권 여당의 자기 정파 시청자들은 반대 정파 시민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느끼기 쉽고 그 과정에서 강화된 정서적 양극화는 그들의 투표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분노와 혐오 감정이 인지 처리 과정의 수준은 낮은 반면, 행동 지향성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널A와 TV조선의 주요 시청자 층이 지지하는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1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원내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9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제3당이 집권에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국민의당의 성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집권에 성공한 최초의 제3당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또 하나의 제3당이 될 수도 있다.

되면 그들의 정치 효능감도 높아지고 분노와 혐오 감정의 특성상 보상이 따르는 행동의 반복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이 과정의 선순환적 반복이 가상적 정치 참여를 만들어 낸다. 채널A와 TV조선의 시청자들은 반대 정파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감정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반대 정파와 정서적 양극화를 강화시키고 그로 인한 반대 정파를 향한 적대감은 자기 정파에 대한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다. 만약 자기 정파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과정은 보상을 받게 되고 보상은 이 모든 과정을 이전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반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상적 정치 참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분노와 혐오의 대상인 반대 정파에 대한 처벌(선거의 패배)이 주는 정서적 즐거움 때문에 채널A와 TV조선의 시청자들 또한 실질적 정치 과정에서 배제될 뿐이라는 사실은 망각된다.

6. 결론

그동안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대체로 “좋은 언론이 민주주의를 돕는다”거나 “나쁜 언론이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식의 결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조금 도움을 받는다고 회복될 수도 없고 조금 해친다고 더 나빠질 것도 없을 만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미래정치연구소, 2015; 윤종빈, 2015; Crenson & Ginsberg, 2004/2013; Crouch, 2005/2008).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역사가 일천한데다 대부분의 시기를 권위주의 군사 정부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공고화되지 못했다(최장집, 2005)고 평가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권위주의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언론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평가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과장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한국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언론만 존재하는 것 같다. 하나는 디지털 매체 기술의 확산에 따른 수익성의 압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에 급급한 언론이고, 다른 하나는 정파적 편향성을 강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몰두하는 언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좋은 언론”과 “좋은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빠지고 언론이 나빠지는 과정에서 둘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좋은 언론과 좋은 민주주의를 구

범적으로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별적이고, 민주주의가 언론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가 늘 그렇듯이 이 연구가 시론(試論)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마땅하다.

이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정치시사토크쇼의 선정적 정파성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참여의 위기를 본질로 하는 배제의 정치가 작동한 결과로 파악했고 채널A와 TV조선은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정치시사토크쇼의 정파성이 분노나 혐오와 같은 적대적 감정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배제의 정치와 적대적 감정에 기반한 정파성은 가상적 정치 참여를 매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배제의 정치는 참여의 위기를 은폐하기 위해 가상적 정치 참여를 만들어 내는 언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의 정파성은 분노와 혐오의 감정을 이용하여 가상적 정치 참여를 만들어냄으로써 배제의 정치 체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악화되고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과 선정성은 강화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나쁜’ 언론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나쁜’ 언론에게 ‘좋은’ 언론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실효성은 매우 낮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려운 길로 가라는 요구와 같기 때문이다. ‘나쁜’ 언론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어렵거나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민주주의와 ‘나쁜’ 언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

현대 정치의 위기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과 경제적인 것(the economic)의 분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Crouch, 2005/2008). 정치 공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해결되어야 할 많은 자본주의적 모순과 불평등이 경제적인 것으로 분리됨으로써 정치 영역은 급속하게 축소된 반면에 기업은 정치적·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본 축적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치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의 양과 범위가 모두 크게 줄어들었다. 현대 정치가 이념적 양극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과 타협의 예술로 불리는 정치가 협상과 타협의 구체적 대상을 점점 잃어 가는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이념적 차별성을 보다 선명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 또한 이런 상황 변화를 맥락으로 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 공간의 축소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 담론의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의 기능적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언론'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인 것의 회복을 통한 정치 공간의 확장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확장된 정치 공간 속에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은 다양한 이념과 현실적 대안에 대해 주장하고 토론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시키게 된다. 정치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그 결과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없는 조건에서 언론의 정치적 기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언론학자들이 언론 못지않게 현실 민주주의에 대해 이론적·현실적 관심을 보다 많이 가져야 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언론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자 동시에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 제도로 존재한다. 이것은 정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수용자의 신뢰를 쌓고 그것을 통해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과정이 선순환할 때 언론은 기업으로서도, 사회 제도로써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치 영역의 축소로 언론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많아질 경우 언론이 생산하는 정치 담론의 질과 양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시 수익성의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감소를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로 상쇄하고자 노력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위해 수용자에게 필요한 뉴스보다 정당과 정치인이 원하는 뉴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것을 스마이드(Smythe, 1977)의 수용자 상품론의 논리를 빌려 비유하자면,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도록 이념적으로 편향된 뉴스를 생산하여 수용자의 정파성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는 정당과 정치집단으로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되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가상적 정치 참여는 이 과정에서 수용자가 얻는 보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 상품론에서 수용자들이 얻는 보상을 지속적인 수용자 상품 생산을 위한 미끼로서 '공짜 점심'에 비유하듯이 가상적 정치 참여 또한 미끼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이런 논의는 아직까지 하나의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만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는 하나의 해석 틀로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시론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후속 연구를 통

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상적 정치 참여 개념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가상적 정치 참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적대적 감정에 관한 진술들은 많은 미디어 심리학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들이지만 실제로 채널A와 TV조선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 가상적 정치 참여 과정이 실증되지 않는다면 이 연구에서 제기한 여러 가설적 주장들은 대부분의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신구 (2012). 어떤 민주주의인가?: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을 통해 바라본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모색. <한국정당학회보>, 11권 3호, 39-67.
- 강원택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18권 2호, 5-38.
- 경향신문 (2016, 4, 21). 한국 언론자유 70위 '역대 최하'. A9면.
- 경향신문 (2016, 3, 31). "박근혜 정권, 역대 한국 정부 중 가장 취재하기 어려워". A23면.
- 경향신문 (2016, 1, 22). 한국 민주주의의 완전 → 미흡 강등. A5면.
- 미래정치연구소 (편) (2015).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서울: 푸른길.
- 박영흠·김균 (2016). 의례로서의 저널리즘: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202-228.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재에 나타난 종편 시사 보도 방송언어 문 제점 분석. URL: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BroadcastLang_View.php?ko_board=BroadcastLang&ba_id=9113&page=1
- 방송통신위원회 (2015). <2015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송현주 (2015). 정파성의 강도와 정책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정파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221-245.
- 윤종빈 (2015). 기로에 선 한국 정당: 위기와 기회. 미래정치연구소(편) (2015).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19-29쪽). 서울: 푸른길.
-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권 2호, 251-287.
- 정철운 (2015. 2. 11). 살아남은 종편의 비밀 언덕은 선거. <시사HN>, 438호.
URL: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8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제2판). 서울: 후마니타스.
- 최장집 (2010).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 <경제와 사회>, 85호, 93-120.
- 최태욱 (2014). <한국형 합의회 민주주의를 말한다: 시장의 우위에 서는 정치를 위하여>. 서울: 책세상.
- 한겨레 (2015, 12, 16). 박근혜 정부 2년 10개월 ... 민주주의, 꺾테기만 남다. A1면.
- Crenson, M. A. & Ginsberg, B. (2004). *Downsizing democracy: How America sidelined its citizens and privatized its public*. 서복경 (역) (2013),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 Crouch, C. (2005). *Postdemocracy*. 이한 (역) (2008), <포스트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서울: 미지북스.

- Dahl, R. A. (1998). *On democrac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llin, D. C.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김수정·정준화·송현주·백미숙 (공역) (2009), <미디어 시스템 형성과 진화: 정치-미디어 3모델>. 서울: 한국언론재단.
- Huddy, L., Feldman, S., & Cassese, E. (2007). On the distinct political effects of anxiety and anger. In W. R. Neuman, G. E. Marcus, A. N. Crigler & M. MacKuen (Eds.), *The affect effect: Dynamics of emotion in political thinking and behavior* (pp. 202-230).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and Westwood, S. J. (2015). Fear and loathing across party lines: New evidence on group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3), 690-707.
- Josephi, B. (2013). De-coupling journalism and democracy: Or how much democracy does journalism need? *Journalism*, 14(4), 441-445.
- Lijphart, A. (2012).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2nd e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arcus, G. E. (2002). *The sentimental citizen: Emotion in democratic politics*.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McNair, B. (2011).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communication* (5th ed.). New York, NY: Routledge.
- Norris, P. (2000). *A virtuous circle: Political communications in post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udson, M. (2008). Why democracies need an unlovable press. Malden, MA: Polity.
- Smythe, D. W. (1977). Communications: Blindspot of Western Marxism.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1(3), 1-27.
- Ulbig, S. G. (2015. 4). Haters gonna hate: Affective polarization and partisan hatre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uth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Denver.
- Williams, B. A., & Delli Carpini, M. X. (2009). The eroding boundaries between news and entertainment and what they mean for democratic politics. In L. Wilkins & C. G. Christians (Eds.), *The handbook of mass media ethics* (pp. 177-188). New York, NY: Routledge.
- Williams, B. A., & Delli Carpini, M. X. (2011). *After broadcast news: Media regimes, democracy, and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투고일자: 2016. 2. 15 게재확정일자: 2016. 5. 26 최종수정일자: 2016. 5. 26

The Crisis of Democracy and Sensational Partisan Journalism

Focusing on Political Talk Shows by Channel A and TV Chosun

Junghoon Lee

Part-time Instructor, Sogang University

Sang-Khee Lee

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political talk shows by Channel A and TV Chosun provoke strong, negative emotions, such as anger or loathing, towards certain parties, politicians and groups only, and tries to explain what's the relation to Korean democracy crisis under the circumstances. Those talk shows by Channel A and TV Chosun, predominantly about anger and loathing towards oppositions, opposition politicians and pro-North Korea people, have contributed to practical exclusion of the citizens from the political process by their imaginary political participation rather than a role as a democratic public sphere, so they have functioned very well in order to sustain the system of Korean democracy as a way of 'the politics of exclusion', and have been retained regardless of their commercial success for the reason. In other words, the Korean democracy has systematically excluded every citizen and amplified ideological conflicts, and in that chaos of excessively produced emotions, has dealt with all the crucial matters using political technology, which is a serious problem. However, for the good of the political power who wants to keep such kind of political system, this became a reason why those Channel A and TV Chosun shows—sensational and politically biased—have survived, and since Channel A and TV Chosun are remarkably functional within the continuance of that political system they can keep being influential in politics.

KEYWORDS imaginary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risis of democracy, the politics of exclusion, sensational partisanship, political talk show